

노인 100여명 ‘아름다운 광주공원 지킴이’ 발족

“음주·가무·도박없는 공원으로”

‘소외된 노인들만의 공원’ 탈피

환경정화 활동·이미지 개선 나서



지난 16일 ‘아름다운 광주공원 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한 노인 100여명이 행사 직후 공원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도박, 노상 방노 등의 풍기문란을 자체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곳에서 도박판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죠.”

광주공원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어 매일 광주는 물론 인근 전남지역에서까지 1천여명의 노인들이 찾아온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후 대부분 공원 주변에서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한다. 문제는 적절한 소ีย거리가 없는 탓에 일부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부르거나 도박판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죠.”

이에 따라 노인 지킴이들은 앞으로 사직동 주민자치위원회들과 함께 노인 계도와 깨끗한 공원환경 가꾸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지킴이에 참여한 정병주(70·광주 남구 백운동)씨는 “많은 노인들이 회비를 내고 노인복지관에서

댄스, 서예, 요가 등 다양한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 노인들의 문란행동으로 인해 광주공원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지자체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노인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도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연계해 광주공원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공원 인근에 밀집된 식당을 끊기는 등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삼민(70) 광주공원 지킴이 공동회장은 “청소년과 젊은층도 찾을 수 있는 어울림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광주공원 복원공사 종합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 5대 도심공원 중 한 곳인 만큼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문화재단은 지속적인 공원 가꾸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아름다운 광주공원 만들기 운동본부(가칭)’를 꾸릴 예정이며, 광주공원 지킴이도 여기에 소속돼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 단체는 교육·홍보사업은 물론 연구조사 및 정책 대안 마련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킴이에 참여한 정병주(70·광주 남구 백운동)씨는 “많은 노인들이 회비를 내고 노인복지관에서



방학이다! 18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삼육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식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광주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이번 주말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KIA 투수 김진우 지명 수배

항군법 위반 기소중지

지난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임의 탈퇴 처리를 당한 유명 투수가 예비군 훈련에 불참, 전국에 지명 수배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18일 광주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수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KIA 소속 김진우(25)씨를 항공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한 뒤 징수배를 내렸다.

김진우는 지난해 12월 예비군훈련을 수 차례 기피해 거주지 예비군 중대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시즌 중 이던 지난해 7월 KIA를 무단 이탈해 잡작한 김씨는 소속팀으로부터 임의 탈퇴 처리를 당한 뒤 4개월의 방학 끝에 광주로 내려와 11월부터 모교인 진흥고에서 운동을 재개했다.

이후 김진우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복귀의사를 밝

히기도 했으나 공식석상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진우의 공시일은 오는 31일.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8월 1일부터 마운드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거나 대리로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전남대, 첨단로봇 연구개발 산실로

로봇연구소 개소

되며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항공대 등 지역 및 수도권 대학의 전문 연구진 33명이 참여한다.

로봇 연구소는 초소형 로봇과 의료 로봇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로봇 개발에 나서고 국가가 추진하는 로봇 연구·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연구소는 국내 마이크로 로봇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박종오 교수(기계시스템공학부)가 이끌게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 등 5개 대학 연구소와 공동연구 및 협력 협정서 (MOU)를 체결, 국제 공동연구와 전문 연구진 파견, 정보교환 등을 추진 계획이다.

세계로봇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소장은 “국내 최대의 대학 로봇연구소로서 첨단 로봇 연구·개발의 산실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5·18단체 ‘옛 전남도청 보전대책위’ 출범

“재난지역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200만원”

(사)5·18 민주유공자유총회와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가 ‘옛 전남도청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5월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도청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정수만·5·18 유족회장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길에서 5·18 단체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이들은 이날 옛 도청 원형 보전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결의문 낭독, 축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단체 회원 30여명은 지난 24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현장인 옛 도청 앞에서 ‘옛 도청 건물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이자 상징적 공간으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도청 본관과 이어진 별관 건물도 5·18 역사적 공간 안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문화중심도 시추진기획단의 현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무기한 천막농성을 펼쳐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말 발효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될 때 시·군·구 단체장이 내리는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지역에서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11개 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태풍과 홍우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66개 시·군·구의 468개 오지 마을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민 대피를 위해 인근 군부대와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옛 도청 원형 보전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때 시·군·구 단체장이 내리는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갓바위·낚시터 등 둘째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국 731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유사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66개 시·군·구의 468개 오지 마을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민 대피를 위해 인근 군부대와의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